



“우리는 뮤지션”

완도 신지동초등학교(교장 노영진)는 19일 밤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인이 함께하는 ‘꿈바리기 별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별밤 콘서트에서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익힌 악기연주, 율동, 합창 등의 솜씨를 마음껏 자랑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목포~보성 철도고속화 재개 시급”

서부권 7개 자치단체장 촉구 성명

전남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포와 보성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재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목포~보성 간 철도고속화사업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전남 서부권 7개 단체장 명의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 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군수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은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과 동북아 경제권 구축, 동서간 물류·교통·문화교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할 국가차원의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철도사업은 교통수요 충족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고 영호남의 교류축진을 통한 대립 해소, 동서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

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면서 “사업 중단이 또 다른 호남 소외의 한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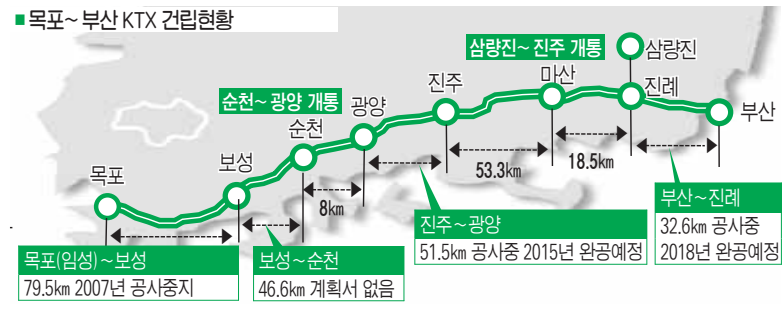
총사업비 1조30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보성 간 철도고속화사업은 정부의 남해안개발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12월 착공했으나 2007년 4월 중단됐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원의 현장유지 관리비만을 반영해 재착공이 요원한 상태다.

전남 서부권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후 정부기관 및 정치권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도 19일 목포~보성 간 철도고속화사업비 300억원이 최근 임시국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처사”라며 조속한 재착공을 요구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해남 쓰레기소각장’ 다시 도마 위에

전 운영업체 비리 의혹

해남 쓰레기소각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전 운영업체의 공사대금 착복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남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달 초 4년간 소각장을 운영했던 J업체로부터 170여 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남군 공무원 김모(45)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에서 일했던 A씨 등 8명은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미납, 공사대금의 부

정 착복, 회사 공구 무단반출 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들은 진술서에서 “지난 2011년 소각시설 1차로 상부과봉기 및 감속기 교체, 2012년 소각시설 스톱스크류 교체 등 4건의 공사를 소각장 직원들이 직접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 명의의 공사 대금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행된 후 해남군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공사대금 착복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동함평산단 기공, 지역발전 견인

함평군

안병호 함평군수(사진)는 20일 “지난 4일 군 역사상 최대사업인 동함평산단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는데,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함평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며 “3년간 지역경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꼭 실행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안군수가 중점을 둔 것은 열악한 군의 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먼저 민자 550억원 등 모두 711억원을 투입해 총 73만5000㎡ 규모로 조성되는 동함평산단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21년만에 새로운 농공단지인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는가 하면 기존의 농공단지인 리모텔링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제조업체수가 지난 2010년 89개에서 지난해에는 136개까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종업원도 802명이 증가했다.

작은 비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버양봉반도 만들어 189개 농가가 참여해 35억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며, 2011년부터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한우산업특구 5년 연장

인구감소·재정절약 고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예방에도 주력했다. ‘친환경농업 선도군’이라는 위상을 재확인하면서 함평 나비쌀은 3년 연속으로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됐다.

새로운 소득원으로 단호박, 부추, 고사리 등 3대 특화작물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한우특구인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를 내실있게 추진해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되는 쾌거를 거두

기도 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351억원을 투입해 18개 지구 18.5km의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사업비 278억원으로 대동철성권역 등 5개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된 상곡지구의 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429억원을 투입, 조만간 완공할 예정이다. 안 군수는 취임 초부터 함평을 대표하는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화대전을 실속 있게 내실 있는 경제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 군수는 “군민들의 성원과 협조,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라며 “남은 1년도 혼자만 걸음을 앞서가기보다 다 함께 한 걸음으로 함께 가는 함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거역의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한 동함평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되지 못할 경우 군정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사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 대책 및 열악한 재정 등은 안 군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 오늘 개장

서남해안 최고 휴양지로 각광받는 완도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손님맞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21일 개장한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10리(3.8km)

길 백사장은 은빛모래와 미세알이 풍부하며 바닷물, 공기바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양지다. 완도군은 명사심리를 찾는 휴양객

들의 편의를 위해 해상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생선회 가격안정화 시책 등을 추진한다.

한편 완도지역에 금일 해당화 해변 등 9개 해수욕장은 오는 7월1일 일제히 개장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전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이전안 보건복지위 통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전북에 제시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현수막까지 내걸었다”며 공약 추진을 요구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전북 이전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일종의 금융기관으로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금본부에는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금본부에는 운용지원실과 전략실, 주식 운용실, 채권운용실 등이 있고 뉴욕과 런던에 별도의 사무소가 있다.

연금의 장기자산을 활용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자산의 다변화로 장기 저금리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기반을 다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기금본부

에서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380조원. 본부는 이들 자금을 채권분야(67%)와 주식분야(24.5%), 부동산·SOC·벤처투자 등 대체투자분야(7.8%)와 복지 및 기타 분야(0.2%)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 유가상 기획관리실장은 “전북으로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금본부를 따라 관련 금융기관이 속속 내려오면 전북이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군산 임피역 테마공원 변신

기차체험 공간 등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인 군산시 임피역이 낭만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사진)

군산시는 “2008년 5월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임피역(국가등록문화재 208호)의 역사와 부속 건물을 고치는 등 철도관광지 조성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임피역에 기차체험 공간과 간이테마공원, 연못 등을 설치,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사업에는 23억원이 투자됐으며 군산시는 임피역과 인근 체만식물원을 연계한 문화기행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건립한 임피역은 당시

군산선(대야~임피~개점~군산항)의 중앙에 위치, 쌀 등 각종 화물을 일본으로 실어 내는 교통요지였다.

1995년 배치 간이역으로 격하된 임피역은 2008년 1월 장항선에 편입된 뒤 2005년 9월 화물취급이 끊긴 데 이어 2008년 5월부터는 여객취급도 중단됐다.

하지만 역 건물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건축적·철도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유류자원(폐선 철로·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잘 자라 다시 만나자”

순창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20일 강천산 일대에서 토종개구리 방사 체험을 하고 있다. 순창군은 이달 말까지 강천산, 쌍치·복룡·구림면 등에 100만 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순창군 제공)

단신

완주 영어도서관 개장...장서 2만권 보유

영어도서관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20일 완주군 봉동읍에 문을 열었다. 봉동읍 둔산리 완주산단단지 안에 자리 잡은 영어도서관은 1800여㎡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영어도서 9000여권을 포함해 총 2만여권의 장서를 마련했다. 1층에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어체험관, 장난감 도서관, 북 카페 등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어자료실, 동아리방, 공부방, 사무실을 갖췄다. 임정영 완주군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영어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정읍시, 모기 쫓는 ‘구문초’ 심기 운동

정읍시는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를 쫓기 위해 해충 퇴치식물인 구문초를 대대적으로 심는다고 20일 밝혔다. 구문초는 잎과 줄기에서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발산하는 허브의 식물이다.

정읍시는 관광명소이자 시민 휴식공간인 내장산위태파크의 음악분수

와 편백숲, 시내의 소공원에 이를 집중적으로 심는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고 조경 효과도 있어 구문초를 심기로 했다”며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캐나다 유통업체와 50만불 수출 계약

고창군은 캐나다 유통업체인 티브라더스를 통해 연간 50만달러 어치의 농특산품을 수출하기로 협약했다고 20일 밝혔다. 티브라더스는 북미지역 최대의 한인 식품유통업체로 캐나다의 대형마트에 한국 농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고창의 복분자 가공 식품과 무, 배추 등을 수입한다.

이게오 티브라더스 대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 캠페인

남원시는 20일 오전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필요 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다. 인감

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며, 기존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제작 관리에 따른 비용과 분실하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